

252분의 회담, 남도 북도 “만족할 만”

北·美 대화 훈풍... 文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가시화

대북특사단
비핵화-남북 정상회담 등 논의

특사단, 김정은과 접견 후 만찬
1박2일간의 일정 마치고 귀환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했던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남과 북 정상이 만나 한반도의 미래를 논의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고, 소원했던 북한과 미국간의 대화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는 토대도 점점 단단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지난 5일 방북했던 대북특별사절대표단이 1박2일의 일정을 마치고 6일 오후 6시께 남측으로 귀환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특사단 대표로 서훈 국정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으로 구성된 특사단을 북에 파견했다.

형식적으로 평창동계올림픽에 김정은



북한을 방문 중인 정의용 수석 대북특사 등 특사단이 지난 5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수석특사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정은 위원장, 서훈 국정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연합뉴스

북한 국무위원장이 파견한 김여정 특사 방남에 대한 답방 성격이 짙었다. 하지만 이번 문 대통령의 특사단 파견은 당사자인 남북한뿐만 아니라 미국 등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강과 북한과의 얽히고 설켜진 실타래를 푸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무게감이 상당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 축사를 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핵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대

응능력 구축도 함께 주문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출범 당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을 국정목표의 하나로 내세웠다.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등 남북관계 차원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고 궁극적으로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국제사회와 함께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당근과 채찍’, 즉 대화와 제재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를 수 차례 밝힌 바 있다.

대북 특사단은 방북 첫 날부터 분위기가 좋았다.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선 리현 통일전선부 실장이 대표단이나 탑승한 비행기 기내로 들어와 영접했다. 공항에선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이 이들을 맞이했다.

당초 방북 첫날 저녁, 또는 이튿날 오전으로 관측됐던 김정은 위원장과의 실제 만남은 첫 날 바로 진행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대북 특사단 5명은 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접견하고

이어 만찬까지 진행했다”면서 “접견과 만찬에 걸린 시간은 저녁 6시부터 10시12분까지”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저녁식사까지 하며 김 위원장과 함께 있었던 ‘4시간 12분’이 이번 특사단 방북일정에서 ‘핵’인 셈이다.

접견과 만찬까지 이어진 조선노동당 건물에서 정의용 실장과 악수하는 김 위원장의 왼손에는 청와대를 상징하는 봉황 마크가 새겨진 흰색 서류 모양의 물건이 들려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지난번 김여정 특사가 방남하면서 김 위원장의 친서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한 데 이어 이번엔 대북 특사단이 문 대통령의 친서를 김 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관측된다. 김 위원장은 앞서 동생 김여정 특사의 입을 빌어 문 대통령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이날 귀환한 정 실장 등 특사단 일행은 곧바로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에게 방북 내용을 상세히 보고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안희정 쇼크’ 정치권도 미투 확산... “터질게 터진 것” 폭로 이어질 듯

정무비서 8개월간 성폭행 4차례
민주당, 안 지사 제명·출당 결정

사회 전반으로 퍼지고 있는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이 정치권으로도 확산되면서 여야가 모두 긴장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던 안희정 충남도 지사로부터 8개월여간 4차례의 성폭행을 당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정치권에 대한 미투 운동이 본격화될 징조를 보이고 있다.

안 지사의 정무비서인 김지은씨는 jt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으며, 이에 따라 민주당은 긴급최고회의를 통해 안 지사를 제명·출당시키기로 결정했다.

또한 민주당은 6일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비공개 간담회 등을 통해 수습 방안을 논의하는데 집중했다.

안 지사는 폭로 이후 이날 새벽 자신의



안희정 충남지사(오른쪽)가 5일 오전 도청 문예회관에서 직원과의 대화 중 성범죄 피해자의 ‘미투’(#Me too) 운동을 장려하고 있다. 이날 오후 안 지사의 정무비서 김지은(왼쪽)씨가 JTBC뉴스룸에 출연해 안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연합뉴스

SNS를 통해 피해자와 국민에 사과하며 충남도지사직 사퇴와 정치 중단을 밝혔다.

이러한 안 지사의 성폭행 의혹에 대해 여야는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큰 충격을 받으신 국민 여러분께 거듭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민주당 대표로서 엄마 된 심정으로 단단한 각오를 갖고 그릇된 성문화를 바꿔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폭력범죄 신고상담센터를 설치

하고 전담 인력을 두어 국회의원, 당직자, 보좌진의 성추행 및 성희롱에 대한 ‘미투’가 있을 경우 철저히 조사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면서 “국회의 독립기구인 인권센터를 설립하고 외부 전문가를 채용해 성폭력 및 인권 전반에 대한 상담과 교육, 예방 업무를 전담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은 여권과 진보 진영으로까지 비판을 이어갔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결과 속이 다른 민주당과 좌파진영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며 “좌파진영이 집단 최면에 빠져 얼마나 부도덕한 성도착증세를 가졌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자신의 비서까지 성폭행하는 주자를 내세워 30년이나 넘게 집권하겠다는 망상을 가졌던 것인가”라며 “민주당이 ‘성폭력당’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충남지사 후보를 공천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렇듯 여야가 이번 의혹을 두고 비판을 하고 있지만, ‘미투’와 관련해 어느 쪽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이 정치권에 퍼지고 있다.

정치권의 남성중심 문화와 권력이 모이는 집단 내에서의 명확한 상하관계 같은 문화 속에서 그동안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번번이 흐지부지되거나 피해자만 고립되는 양상을 보여왔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날 당

젠더폭력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위직급은 남자가 많고 낮은 직급은 여성이 많은 데다 고용이 불안정한 국회는 성추행, 성폭행이 일어나기 쉬운 조건”이라며 “두고 봐야 알겠지만, 더 나오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실제로 한 국회의원의 5급 비서관은 안 지사의 성폭행 의혹 폭로 이후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근무하면서 일어났던 성폭력 문제를 폭로했다.

국회 직원 페이스북 페이지인 ‘여의도 옆 대나무숲’에서도 “터질게 터진 것”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되며, 이와 관련한 익명의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때문에 안 지사의 성폭행 의혹 폭로 이후 국민여론도 모아지고 있는 만큼 정치권을 향한 미투가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게다가 지방선거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상대간 폭로가 있을 가능성도 높아 정치권에 ‘태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이창원 기자 mediaeco@

6·13지방선거, 야당의 필승 전략은

바른미래
개헌·선거제도·안보 등 정책 마련
자유한국
여성·청년진입 통해 개혁의지 부각

6·13지방선거를 99일 앞둔 6일 야당이 필승 전략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하고 있어 야당 입장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선거가

예상돼 각 정당은 정책, 연대 등 다양한 각도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찬회를 갖고 개헌 및 선거제도, 안보정책 등 당 입장을 정리하며 정책 마련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바른미래당은 개헌 및 선거제도, 지방선거 등에 대한 자유토론을 가졌으며, 이태규 사무총장은 지방선거 전략 및 대책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화두’인 권력구조·정부형태 등이,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전략적 목표·구도 등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미래당이 핵심 이슈로 삼고 있는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논의됐으며,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된 당의 입장은 7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의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인물난’을 겪고 있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1차 당 전국여성대회를 열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정비에 나섰다.

이 자리에는 홍준표 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1000여명의 인사가 참석해 지방선거 출마 여성 예비 후보들을 격려했다.

이같은 자유한국당의 행보는 당 지지율이 쪼뻛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 청년 등의 진입을 통한 당 개혁의지를 부각시키려는 행보로 읽히고 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전날 ‘지방선거 공

천 50% 여성·청년 정치 신인 개방, 20% 경선 가산점 부여’를 밝혔다.

홍문표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방 선거 공천의 50%를 여성과 청년 정치 신인에게 개방하고자 여성·청년 중 처음 출마하는 신인에게 20%의 경선 가산점을 부여할 것”이라면서 “여성과 청년, 정치신인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게 이번 공천의 기준”이라고 말했다.

또한 다문화·장애인 등 소외계층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5세 이상 노인의 정치권 진입 방안 등도 제시했다.

/이창원 기자